

<첨부> '주목하는 시선 2020' 3월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

전례 없는 역병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이전에 겪었던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양상을 추월한지 오래고, 언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지 전망하기 힘들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영향권에 들면서 각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물론, 공중위생과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태세, 대국민 소통 등의 총체적인 역량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방역 기관을 필두로 한 당국의 신속한 대처, 언론 매체의 정확한 정보 등 공적 주체들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한 보도가 눈길을 끈다. 한겨레, 서울신문, UPI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¹⁾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장) 연구팀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에 대한 전국 1000명 상대 설문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차(1.31~2.4), 2차(2.25~28), 3차(3.25~3.28)에 걸쳐 전국 18살 이상 성인 1000명을 인 구비례방식으로 표본 추출해 설문한 결과다(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

3차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면서 보건당국(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기관, 보건복지부)과 정부(청와대, 지방자치단체) 등 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초기 보다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뢰도 높은 기관은 질병관리본부로, 86.0%의 높은 신뢰도("다소 신뢰" 50.1%, "매우 신뢰" 35.9%)를 보였다. 2차 조사 때와 비교해 신뢰도 상승폭이 가장 큰 주체는 청와대였다. 11.5%포인트가 상승했다.

3차 조사(3.25-28일)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중국이나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 80.5%가 높다(7~10점)고 답했고, 낮다(1~4점)는 응답자는 5.5%에 그쳤다. 비교 대상 국가는 중국(32.8%), 이탈리아(24.4%), 일본(21.0%), 미국(10.3%) 순이었다.

정부 대응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진단 검사의 속도와 혁신성'(54.5%)이었다.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17.9%)가 뒤를 이었다. '의심증상자, 확진자의 병원(치료) 접근성'(8.5%), '국가가 부담하는 감염증 관련 비용'(7.1%), '시민사회의 예방지침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6.0%) 등도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그런데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서 실시한 3차에 걸친 조사 결과를 보면 보건당국의 대응수준, 병원 서비스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뢰가 계속 하락한 주체가 있다. 바로 언론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언론 신뢰도는 1차 46.4%에서 2차 39.9%, 3차 30.7%로 지속하락하며 총 15.7% 포인트가 극명

1) 구본권, 「"일본 최우수, 한국 언론 낙제점" 코로나19 성적표」, 한겨레, 2020.4.1./김유민, 「"언론만 빼고"...한국 코로나 대응 신뢰도 높아져」, 서울신문, 2020.3.31./김현환, 「국민 80% "한국 코로나 대응 다른 나라보다 우수"」, UPI뉴스, 2020.3.31. 등

하게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언론은 이미 1차 때부터 다른 주체에 비해 신뢰성이 낮았지만 2차, 3차를 거치며 더욱 하강했다. 조사에서는 사회적 신뢰 고갈을 막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무책임’(34.6%)을 1위로 꼽았고, ‘미디어의 과장·허위·과잉 정보’(19.2%), ‘감염병 사안의 정치적 해석과 쟁점화’(14.9%)를 각각 2위와 3위의 순으로 선정했다.

요컨대 언론만 빼고, 여러 주체들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높아진 것이다. NCKK 언론 위원회는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평가를 새삼 주목하게 된다. 언론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는 그 양상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언론의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국가적, 나아가 전 지구적 재난 하에서 언론은 속보경쟁, 단독경쟁보다는 정확하고 검증된 뉴스의 보도로 사안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소통과 이해를 제고시켜야 한다. 나아가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그리고 지구촌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극복에 대한 인류애적인 신뢰와 비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령, 지역, 계급, 이념과 무관하다.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지구의 존망이 흔들리는데 정치적 유불리와 진영주의를 들이밀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불거진 이후 우리 언론이 보여준 것은 신뢰나 안정감과는 거리가 멀다. 당국의 대처 상황을 보면서 비판할 것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전선에 처해 있는 일본 등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일단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언론에서는 신중함과 사려깊음보다는 비전문성, 선정성, 상업성, 정파성 등만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무책임성’ 그리고 ‘과장, 허위, 과잉 정보’와 ‘정치적 쟁점화’에서 한국 언론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은 2월 중순까지 증가세가 미미했고 그러자 선부른 낙관론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2월 18일 이른바 31번 확진자가 출현하고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정부는 2월 23일 코로나19 사태 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코로나19 현황표에서 중국 다음 2위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한국인을 태우고 베트남으로 가던 항공기가 회항해야 하는가 하면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이 서둘러 한국을 벗어났다. 한때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181곳까지 늘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다. 마스크 대란, 자가 격리 등으로 불안과 좌절, 우울함이 갈수록 미만한 코로나 블루(Corona Blue)였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에서의 교훈을 생산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 집단과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국민이 있었다. ‘추적(trace)’ ‘검사(test)’ ‘치료(treat)’라는 이른바 ‘3T 전략’을 통해 점차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상황을 통제해 나갔다. 선제적 진단,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의 분리 대응, 드라이브 스루, 투명한 정보 공개 등 과감하고 참신한 기법을 도입했다.

물론 초기 대응을 좀 더 잘했다면 하는 아쉬움, 2월 중순의 설부른 낙관 등 미흡한 점이 없지 않겠으나 그만하면 진정성과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 것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본다. 특히 방역 전선에서는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이 어떤 작동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가 요구될 때 도리어 억측과 폄하, 매도의 분위기로 흘렀다.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걸러들기만 기다리는 ‘갓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이라고나 할까. 코로나19가 정쟁이나 스캔들의 이슈는 아니지 않은가.

한국 언론의 코로나19 관련 행태를 돌아보면 초기부터 우한폐렴(코로나) 병명 논란을 필두로, ‘코리아 포비아’ 관련 보도, 중국 봉쇄 등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다. 베트남에서 격리된 한국인 승객이 “고작 빵 조각 몇 개 주네요”라고 말했다는 기사는 현지 문화의 무지에서 오는 해프닝으로 돌린다고 하자. 그러나 중국혐오에 편승한 모 신문사 베이징 특파원의 <“여기는 한국인 집” 문 앞에 차별 딱지 붙이는 중국 공간·이웃> 현지발 기사는 중국어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기에 매우 고약한 경우였다.

코로나19 국면이 엄습한 초반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스크 달라” 대기 줄에 ‘버력’ 70대 쓰러져 숨져>라는 제목으로 오보를 한 기사 등은 취재 부실과 미검증으로 인한 기사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기명 칼럼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언론사에서 흑역사의 페이지에 남을 것이다. 의학 적 인과관계가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연결한 <文 “일본 좋은 성과” 칭찬 19분뒤… ‘4995번’은 숨을 거뒀다>는 기사의 의도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보도였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잘못 제기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안전성에 대해 팩트체크 없이 보도해 논란을 증폭시킨 사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BBC 인터뷰를 자화자찬으로 비난하더니 파문이 일자 정정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기사를 통째로 날린 사례, “달러의 방주에 올라타야 한다”며 한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조롱 섞인 충고를 했다가 이것이 적중해버린(?) 희대의 칼럼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의료인이 처음 사망했다”고 보도했다가 몇 시간 뒤 이를 전문 취소한 사례도 빠뜨릴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 한국 언론이 보인 각종 폐단들 - 부실 기사, 가짜뉴스, 오보, 진영주의적 과잉 프레임 등의 사례는 예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 언론이 단편적이고 표피적인 기사들로 수용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신, 냉

소와 혐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동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예의주시한 해외 언론은 편견 없이 한국의 사례를 추적하고 검증하는 보도를 해 눈길을 끌었다.²⁾

2월 24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한국의 사례를 보도했다. 한국 조지메이슨대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방문연구원의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아 보이지만 이는 높은 진단 역량과 언론 자유,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책임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 인터뷰를 기사화했다.³⁾ 이 인터뷰는 시점 상 다소 때 이른 논의의 감이 없지 않지만 사실상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을 총체적으로 제대로 설명한 것이다.

이후 NYT는 “한국은 어떻게 커브를 평탄하게(flattened the curve) 만들었는가”에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검사, 재난 문자 메시지,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의 시스템을 검증하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 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적시했다. 해외 언론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진단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구체성에 주목했다.

특히 독일의 로이터는 3월 18일 보도에서 한국에서는 1월 하순 설 연휴 때 보건당국이 20개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긴급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을 독려했던 이른바 '서울역 긴급회의'에 주목했다. 이러한 기민한 회의 덕에 한국에서는 코로나 진단 키트가 2월 초에 개발될 수 있었는데 이 키트를 활용해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⁴⁾ 1월 하순의 이 회의를 주목한 국내 언론은 없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기도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직접 방문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how it works)에 주목하는 르포 기사를 낸 CNN, 선제적으로 병상을 확보함으로써 병상 부족의 문제에 대처하는 한국의 방식을 주목한 WSJ, '코로나19 중환자실 안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르포로 담은 BBC 등 해외언론에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이 강한 보도물을 속속 출고했다.

3월 중순경 확진자보다 격리 해제된 환자가 많이 나오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한국의 코로나대응에 대한 해외언론의 찬사는 더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퐁앵(Le Point)은 커브스토리로서 '유럽의 한국 따라 하기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인 프랑스인의 편지'라는 형식으로 한국의 자가 격리 애플리케이션 등 방역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도 인권침해라는 망상을 그만두고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독일 대표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한국이 미국, 일본과 달리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했다.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전략: 국가

2) 이정환, 「'국뽕'이 아니라 매뉴얼, 코로나 사태로 읽는 솔루션 저널리즘」, slow news, 2020.3.30

3) 강유빈, 「“한국 확진자 급증, 높은 진단역량과 정보 투명성에 기인”」, 한국일보, 2020.2.25

4) 김서영, 「“설연휴 서울역 모인 제약사들…일주일만에 진단키트 승인됐다”」, 연합뉴스, 2020.3.19

전체를 검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슈피겔은 한국과 미국의 초기 대응이 달랐으며 신속성에 주목했다. 슈피겔은 “한국의 첫 번째 환자는 지난 1월19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도 첫 번째 환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귀중한 몇 주를 낭비했고 그동안 한국은 빠르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⁵⁾

이 같은 보도는 해외 교민들이나 눈 밝은 국내 페부커 등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소개되고 있다. 대체로 외신들의 보도는 현장에 충실하고 실사구시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을 관찰해 패턴을 발견하고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해법을 찾는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외신도 천차만별이고 수준 이하의 기사들이 많을 것이다. 뿐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기사를 쓰는 국내 언론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기사들을 일별하면 국내 언론의 '저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19와 같은 범지구적인 이슈에서 품질의 차이가 역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주특기 경연 대회에서 실력을 겨룰 때처럼 우열이 백일하에 판별이 된다. 한국 언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네티즌들은 질 좋고 가성비 좋은 상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듯이 한국 언론의 기사 대신 외신을 찾아가고 있다. 영어가 되면 되는 대로 또는 아니면 아닌 대로 조금만 공을 들이면 SNS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구글번역기가 있고 번역문을 제공하는 본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기사를 요약본으로 카드 뉴스로 만들어 카톡으로 텔레그램으로 페이스북으로 돌리면서 이를 공유한다.

그 결과 한국을 재발견하고 한국의 품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외신 덕분에 우리 자신도 몰랐던 실제적 진실에 대한 접근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BBC코리아가 민족언론이고 로라 비커 특파원이 민족기자'라는 조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이 '웃픈' 이야기인가. 어쨌든 이 과정에서 한국 매체에 대한 접촉도와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의 탄압으로 혹은 순치되어 국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기자들은 행간에 일말의 진실을 투영하려 애쓰기도 하고 1단 기사라도 진실보도를 하려 노력했다. 그 엄혹한 시절에 불가피하게 한국민들은 외신에 목말라 했다. 외신 기사를 찾았고 어렵사리 외신 보도를 구했다. 그러한 시대는 종언을 고한지 오래다. 지난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아시아 최고라고 했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들이 이렇게 한국 언론 대신 외신을 찾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지난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19 언론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광고주(68.4%)'를 꼽았다.⁶⁾ 이어 '편집·보도국 간부(52.7%)', '사주·사장(46.4%)' 등의 순이었다. 매체

5) 정희인, 「아직도 이어지는 찬사...“미국·일본과 달랐던 한국, 결국 옳았다”」, 머니투데이, 2020.4.9

유형별로 보면 '광고주'를 언론 자유 제한 주요 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신문사(74.7%), 인터넷 언론사(74.6%), 뉴스통신사(64.6%)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력은 여기에서 거론도 되지 않는다. 정녕 광고주 탓을 돌리면 그만인가. 한국 언론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무책임', '미디어의 과장·허위·과잉 정보', '감염병 사안의 정치적 해석과 쟁점화'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이번 시선위원회에서는 .아이템 선정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외에, 재난기본소득, n번방 사건, 위성정당 등 4.15 총선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코로나 사태로 가려진 것들 등에 대한 진단과 토론이 있었다. 결국 최대의 현안인 코로나19로 돌아왔다. 1월, 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코로나19인 셈인데 '다시다시 토로나19'가 되었다. 석 달째 같은 범주의 아젠다를 설정한 것은 시선위원회 출범 이래 초유의 일이다.

6) 양정우, 「“언론자유도 2007년 수준 회복…최대 적은 '광고주'」, 연합뉴스, 2020.1.13